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Measuring Multiculture Acceptance by Skewed Interest in Regions
: A Case Study of Dalseo-gu, Korea

김혜순* · 이시철**

Kim, Hye-Soon · Lee, Shi-Chul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III. 연구 설계 및 분석틀
- IV. 실증분석
- V. 마무리

이 논문은 다문화수용 연구 및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을 개관한 후, 대구시에서 거주 외국인이 가장 많은 달서구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 정도와 영향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특히 국가별로 편중된 관심정도에 주목하였다. 관련 개념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선행연구와 논의를 참고하여 용어와 개념의 일관된 사용을 시도하였다.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정도와 국가별 관심편중 정도를 교차하여 4개 집단을 생성한 후, 각 집단별 수용성을 더미변수에 의한 회귀분석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가운데, 기준집단인 다문화친화형과 비교할 때 대척점에 있는 차별집재형의 다문화수용정도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상이한 집단의 성격과 수용성의 정도에 따라 달리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주저자)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3. 12. 23, 심사기간(1, 2차): 2013. 12. 23 ~ 2014. 2. 21, 게재확정일: 2014. 2. 21

□ 주제어 : 다문화, 국가 편중적 수용, 지역성, 거주 외국인

This study purports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multiculture acceptance’ varies by different groups of local residents. Following relevant literature review, an empirical analysis is made on data collected in 2009 from 200 samples from the district where immigrant density is the highest in Daegu, Korea. Emerging as a new field of research, measures of the acceptance is proposed, and emphasis is put on public sentiments on ‘skewed interest’ in particular countries vis-a-vis overall interest in foreign culture. Average scores on the two interest levels are used to make four different groups, and a dummy regression model was tested on the acceptance with the groups and individual socioeconomic variabl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among the groups, and the largest gap exists between the ‘multiculture-friendly’ and ‘latently discriminative’ groups. Not only the acceptance but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should be considered in future policy making.

□ Keywords: multiculture, country-specific acceptance, locality, resident aliens

I. 들어가며

세계가 지방이 되었고, 지방이 세계가 되었다. 지구촌의 돈과 정보와 사람이 모두 열렸다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 대비로 국외로 사람을 가장 많이 내보내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며, 동시에 관광객이든 이주민이든 많은 외국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삶의 터를 마련해 가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2.8%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정책 수요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민의 오랜 역사를 경험한 서구 선진 국가에서도 인종·민족 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이민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본다. 보통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국인 또는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나라 특히 지방의 맥락에서 다문화 관련 연구 및 실무 이슈는 국제화 또는 세계화 현상과 많은 경우 연결되어 왔다. 예컨대, 1990년대 지방의 국제화 논의가 이른바 ‘내향적’ 국제화(inward internationalization)로 연장 확산되어 왔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국제화 이슈 논의에는 으레 미국, 유럽, 일본 등 개발국과의 교류 협력에 중점이 있어왔다. 그에 비해 다문화 이슈는 지역별 이민자 유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정책 방향 등을 다룬다는

현실, 특히 논의 대상이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집단이라는 차이가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지방행정에 새롭게 등장하고 각광받아온 국제화-다문화 과제가 세계화라는 추세의 반영이면서도 다른 층위(이시철·김혜순, 2009)라는 점은 이제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폭넓은 관심을 가질 경우 다문화 수용도 쉬울 거라 기대된다. 하지만, 국제화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또한 대상이 개발국인지 미개발국인가에 따라 관심과 수용정도가 다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외국 문화 일반에 대한 관심도가 다문화 수용의 중요한 요인이라 추정되지만, 대상이 되는 문화와 이민자의 출신국 배경에 따라 인식 및 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 관심과 편중성의 차이가 다문화 수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이 연구의 핵심이다.

한편, 이민자는 입국 및 체류자격에 연동된 거주지역 한정성, 언어와 관습 등의 사회문화 자본 부족으로 원주민보다 지역 밀착적인 삶을 갖는다(김혜순, 2008). 지역밀착성이 큰 이민자 대상으로 전국 표준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한다면 이민자는 물론 이를 관망하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우며, 제한적 유용성을 갖게 된다. 이민자의 입국과 정착과정에는 국가차원의 제도마련과 집행이 중요하지만, 적응과 일상생활에는 국민보다 지역주민의 다문화수용 정도가 중요하다. 주민의 수용도를 넘어서는 사회통합 드라이브는 이들의 관심사나 일상과 분리되어 피상적이고 전시적인 결과로 그칠 것이다. 하여 이민자의 출입국과 체류자격관리를 제외한 이민관련 사회통합정책은 선진 이민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관장한다.

다문화수용이란 이민자가 아닌 국민에 해당되는 과제이며, 외국인이 사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주민의 외국인과 외국문화 수용정도가 중요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와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인식과 태도야말로 현실적인 영향력이자 각종 정책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목표의 구체화는 정책대상 집단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지역현실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지역현실을 구성하는 중요한 축인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화와 다문화의 배경 아래, 지역적 여건을 기반으로 주민의 다문화 수용 정도와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되, 특히 대상국가에 따른 차별적 수용 양상 파악 및 다문화수용 정도와의 관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에는 필자들이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 달서구의 의뢰로 2009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수집했던 자료를 사용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다문화, 이슈와 연구 개관

1) 정책분야

세계적으로나 한국사회에서 세계화와 다문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지역에 개발국 출신 외국인의 방문과 미개발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 증가한다는 것은 분명 세계화의 일환이며, 민족적·문화적 다양성의 다문화 과제를 제기한다.

이들 과제에 공통되는 국내 유입 외국인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정책대상이었다. 다문화 이슈가 확산되기 전부터 (옛)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KLAFIR, 현재 대부분 기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이양)에서 '내향적' 국제화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했다. 국제화 또는 세계화 현상에 조응하는 현지화(localization)의 일환으로 1990년대 강조된 내향적 국제화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개발지역과의 정치, 통상, 문화 및 교육협력력을 지방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이 실질적 내용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국내유입이 증가한 미개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도 세계화의 한 양상이지만, 지역주민과 공간과 일상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기 교류와는 전혀 다른 정책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중앙부처의 대응은, 정책대상의 명칭은 부처 별로 달랐지만, 이민자중심이었다. 법무부는 이민자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와 국가성원으로서의 정착 등에 초점을 두며, 여타 부처 또한 이민자의 정착과 적응지원이고,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관리였다. 이민자대상 정책사업(이른 바 다문화정책사업)의 부처 간 중복이 지적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다문화정책'을 주관하는 것으로 정비되었다. 이민자 대상 중앙부처의 대응이 다문화가족, 구체적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대상이라는 점이 반영된 개편이었다.

지역 현실을 주관하는 지방정부는 2006년 중앙정부의 개입 이전부터 지역 내 연구자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면서 결혼이민자 대상 정착지원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해왔다. 중앙부처의 주관부처 조정이후 당시 행정안전부의 2011. 7 부서조정 지침이 있었는데 대다수 지방정부에서는 여성청소년복지 관련 부서가 관련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이면서 지역주민인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은 지방정부가 여전히 '내향적 국제화'의 일환으로 약소하게 지원하거나 지방노동청과 각 대학에 적응과 정착지원이 일임된 상태다.

'내향적 국제화'가 개발국 및 미개발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중상층 이상이면서 일시 방

문인 극소수 외국인 대상의 개방과 협력중심이라면,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는 미개발국 출신이고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하층에 속하는 결혼이민자 대상의 정착과 적응지원 중심이라는 차이는 실재한다. 정책대상과 기조가 다르므로 이들은 업무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나아가 후자는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과 복지서비스이므로 세계화·국제화와 연결시킬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내 '다문화정책' 주체의 세계화와 국제현실에 무관한 정책의제 설정 때문일 뿐이라는 학술적 분석이 등장(김혜순, 2014)하고 있지만,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논제다.

본 연구에서 보다 주목할 것은 첫째,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대응은 이민자에 치우쳐있고, 이민을 처음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대상의 정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둘째,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하지만, 대중의 이민다문화수용은 미개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및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자는 전체 이민자의 60%지만, 후자는 16%정도(안전행정부, 2013)일 뿐이다.

2) 학계, 다문화수용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와 다문화 개념의 범위 및 중복성은 국내 연구(양기호, 2006; 윤재선, 1997; 이시철·김혜순, 2009)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며, 다문화 현상은 지난 약 10년간 정책 현장뿐 아니라 학술연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부상해왔다. 사회학, 여성학, 문화인류학, 법학, 지역학 등은 물론이지만 행정/정책학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예로 <한국행정학보> 2008년 가을호에 "다문화시대 소수자 행정과 정책"이라는 이름의 특별 세션이 만들어질 정도였으며(원숙연, 2008 등 참조), 이후에도 양과 질 측면에서 꾸준한 추세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병량(2012)은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행정/정책학 분야 학술지에 실린 다문화 관련 논문을 조사했는데, <표 1>은 조사 결과의 일부를 종합한 것이다.

<표 1> 행정/정책학계의 유형별 다문화 연구 경향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인종적 다문화 정책	시론적연구	2	1	1	4	3		11
	사례연구	1		2	4	2	2	11
	기초실증연구			3	4	6	1	14
	외국사례소개, 비교			2	2	1	1	6
사회적 다문화 정책	시론적연구		1	3	1			5
	사례연구	1		2		1		4
합계		3	2	13	15	13	4	51

출처: 이병량(2012)에서 수정, 정리

위 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점으로 관련연구가 감소하며 연구유형 또한 초기와 달리 시론적 연구부터 특정 지역 및 집단 대상의 경험적 실증 분석, 정책사례, 정책 방향 제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다가 2011년 약간 소강상태에 있다. 다만, 많은 연구가 이른바 '인종적' 다문화 분야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다문화 영역에는 소홀한 현상도 뚜렷하다고 한다.

행정/정책 분야에서 다문화수용정도를 다룬 논문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이민자에 집중해왔기 때문이겠지만, 국내 대중담론 뿐 아니라 정책·학술연구의 절대 다수는 이민자 특히 결혼이민여성 대상이었다.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는 2008년부터 외국인정책, 2010년부터는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정책 사업이 있었지만, 거의 모든 '다문화정책' 분석과 평가가 국민 대상 정책의 미흡을 지적할 정도로 배정된 예산도 가시화된 정책 사업도 적었다(김혜순, 2013: 275). 그나마 캠페인성 다문화구호와 담론, 국내 현실과 유리된 다문화교육이 대부분이다(김혜순, 2009: 49-52). 90년대 이후 EU 회원국의 정책담론에서 부상한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지표 만들기'를 원용하여 국민과 이민자의 쌍방향적 또는 다문화적 사회통합이 국내에서도 주창되었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이민사회의 전개는 건국부터 이민국가인 미국, 호주, 캐나다에게는 법제도 차원의 도전이지만, 민족국가들이 지리적으로 인접된 유럽은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요구받는다(Fishman & Mesh, 2008: 83-85)고 한다. 더구나 세계화에 따른 교통통신의 발달과 저비용으로 이민자의 초국성(transnationality) 실천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이민자와 내국인, 이민자 집단 간 조화로운 관계실현이 어려워졌으며, 따라서 다문화주의/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이민관리뿐 아니라 사회통합정책이 1990년대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박명선, 2007)했으며,¹⁾ 오랜 이민역사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과 이민정책기조의 변화가 빈번하고도 광범하게 나타난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단일민족임이 강조되어 온 한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동남아 출신 이민자의 유입이 세계화이후 시작되어 이민사회 전개는 한국 초유의, 사회변동 수준의 변화다. 북미와 호주보다 유럽에 유사하지만, 한국으로의 이민송출국은 지리적·민족적·문화적 구성이 한국의 단일민족·국가주의와 양극이라 할 대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럽보다 갈등과 도전이 클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초국성은 세계화시대의 이주자인 결혼이민여성에게도 당연하지만 이에 반하는 단일 민족·국가주의, 가족주의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라 할 만큼 심층적이고도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는 국내 이민정책환경의 핵심 특성이며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1) 유럽의 공동 사회지표조사에 이민 수용관련 문항이 추가된 것은 유럽바로미터조사(EBS, 1970년대 초 시작)는 1997년, 유럽사회조사(ESS, 2002년 시작)는 2002년이라 한다(안상수 외 2012: 40-42).

한편, 2000년대 들어 대중매체와 정부정책 사업으로 시작된 다문화열풍(김혜순, 2008) 덕분에 이민자의 크기와 중요성은 부풀려졌고, 외형적 경제수치와 달리 양극화, 고학력자와 50대 이상 층의 실업, 노후 및 사회불안, 경기침체, 우익정당의 집권 등, 유럽지역 연구에서 지적한 이민자의 부정적 영향을 인지할 여건(Semyonov et al., 2008)이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해 있다(김혜순 2013: 278). 그동안 단일민족·국가주의에 동원되어온 대중으로서는 정부의 이민자지원중심 정책과 국민대상 계몽적 다문화강조에 좌절과 혼란을 느끼고 냉소적일 수 있다. 즉, 다문화수용성은 서구와 다른 이민정책환경에 놓인 한국사회에 세계화이민의 보편성을 가진 이민자 증가, 결혼이민여성 중심의 정부 지원, 이민현상에 낯설거나 냉소적인 한국사회와 국민 대상 정책의 필요성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거주 외국인의 증가란 이민사회의 전개라는 인구통계적 사실이며, 대두되는 정책과제는 지금까지의 단일민족·국가주의를 넘어서는 또는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이다. 이민사회 전개, 다문화사회 정착, 다문화수용은 이민자 당사자보다는 국민과 한국사회를 위한 과제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 국민적 합의와 동원, 국민/민족통합, 국민/민족정체성 등이 강조되는 일상에 이민다문화수용이 자리할 위치와 양상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내부의 변화와 대응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만큼 '다문화'라는 특수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정책 일반의 주목이 필요하다. 초기였던 80년대 중반에 특수 분야였던 '정보화'가 이후 확산되면서 정책, 학계 모두 전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나 배경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정책기조가 지속되는 한 한국의 이민사회 전개 또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연구

1) 주요 용어의 용법

이민다문화 또한 여타 사회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오랜 현실경험과 연구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분야보다 복합 학문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국내는 현상은 물론 연구도 일정한 반면, 정치·정책적 사고 및 대중담론에 의해 외래 개념이 전유되면서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용어혼돈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현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용어통일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개별 연구자의 일관된 용어사용을 통한 소통이 시도되어야 한다.²⁾

'다문화수용성'은 '다문화수용성 제고'라는 국민대상 정책과제의 공식 명칭이지만, 이 글에

2) 국내 문헌에 자주 인용되는 Stephen Castle교수 또한 2012년 9월 국내 학술세미나 석상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하 용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은 김혜순(2014)에 있음.

서는 거주외국인 증가에 대해 내국인이 갖는 인식과 태도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정도를 사용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적절한 용어는 이민 수용(immigration acceptance)이라 판단하지만 국내 여타문헌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다문화수용으로 한다.

주1에 소개한 EBS, ESS, ISSP 등의 문항에는 이민과 이민자(immigrants)라는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지만, 같은 문항을 차용한 국내 관련 연구에는 외국인, 이주자, 외국이주민, 다문화라는 용어가 설명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외국인은 일상용법 상 외모가 다른 경우와 외국 국적이라는 의미가 혼용되는데, 이 글에서 후자는 외국 국적으로 명기하면서 구분하고 전자는 맥락에 따라 거주외국인, 외국인주민,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거주외국인은 90일미만 체류하는 방문외국인에 대비되는 용어다. 이는 안전행정부 기준으로는 외국인주민, UN기준으로는 단기이민자인데, 거주자임을 강조하는 맥락에서는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을, 이민배경여부를 강조할 때는 이민자와 국민/지역주민으로 한다. 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적인의 의미일 때는 그리 명기하고 이민배경이 없는 출생한국인의 의미는 국민으로 쓰되 국가주의와 연결될 여지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내국인을 사용한다. 이주자는 원주민(native)과 구분하고, 이주과정이 부각되는 국제이주자(international migrants)와 달리 이민자(immigrants)는 입국자다.

‘다문화정책’은 대중적으로는 물론 학계에도 널리 회자되는 용어지만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리 쓰이는 그대로 차용한다는 의미에서 따옴표를 쓴다. 이민정책은 이민관리(출입국 및 체류자격관리)정책과 사회통합정책으로 구성되며,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정책의 한 종류다. 이상의 용법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정책이나 법령은 문건의 용어대로 쓴다.

2) 다문화수용성 관련 논의

2012년 처음 발표된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이하 국민조사)’(안상수 외, 2012)는 단순 통계조사결과가 아니라 지표개발과정, 본조사결과, 결과 별 향후 ‘다문화정책’ 과제와 제안도 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이 지표를 활용하여 매 3년마다 19~74세의 일반국민과 중고교 청소년 각각 대상의 국가통계를 생산하겠다(여가부, 2013)고³⁾ 한다.

‘다문화수용성’은 국민조사(안상수 외, 2012: 52)에서 민무숙 외(2010)의 다양성과 관계

3) 다문화수용성 지표는 1차적으로 이명박 정권하 사회통합위원회 주도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민무숙 외, 2010)이 개발했고, 이를 보완한 최종 지표는 해당과제의 주관부처인 여가부주도로 역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안상수 외, 2012)이 완성했다. 지표 관련 자료의 수집대상 선정은 2010년 인구총조사의 조사구에서 250개 추출, 총인구의 시도·성·연령별 분포를 고려하여 추출된 조사구에 2,500가구 배당, 각 가구에서 19~74세에 해당하는 1인으로 했다니(윗 글, 68쪽) 명실상부한 전 국민 대상 조사라 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2011. 12 - 2012. 1이었다.

성에 보편성을 추가하여(아래 본 논문이 강조한 부분) 아래와 같이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정서, 상호교류의 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 하위 8개 영역과 각 영역별 질문항목이 선정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기와 다른 구성원이나 다른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인종, 국가 등)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상호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관계설정(공존의 방향)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며,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대할 때 출신지역이나 경제적 수준별로 차등을 두지 않으면서 세계시민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총체적 의미의 태도”

다문화수용성은 광의로는 상이한 인종 및 문화집단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정도로 이해(윤인진 외, 2010)되지만, 실제 측정을 시도한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과 측정문항은 거의 개별 연구마다 다르다. 이는 국민조사(안상수 외, 2012: 19-44)에 자세히 개괄한 국내외 선행연구에도 드러나는데, 이들을 생략하면 백승대·안태준(2013)을 주목할 만하다. 선행의 다문화수용 측정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라는 문화다양성 차원은 아예 생략되었고, 여가부 주관으로 개발된 ‘다문화수용성’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정체성은 별개 개념으로 분리한 후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 ‘다문화정책’에 대한 태도, 외국인주민에 의해 인지된 위협 등으로 다문화수용정도를 측정했다.

다문화수용성, 문화다양성, 이민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태도, 이민자/외국인의 영향 및 위협인지 등은, 무엇이든 부르든 무엇으로 측정하든, 개인단위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유사한 관계를 보인다. 낮은 학력-소득-직업지위, 정치적 보수 성향, 농촌거주인 경우 부정적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일찍이 알렉스 인클레스(Alex Inkeles)로 대표되는 ‘근대형 인간(modern men)’연구에서 그리던 근대형 인간은 고정관념, 편견, 차별, 폐쇄성, 낯설고 이질적인 것의 거부·회피가 적고, 지방지보다는 전국지, 글로벌 시사지를 읽는 코스모폴리탄의 인식과 행동을 보이며, 사회경제적 변인 상 중상층 이상의 자리를 차지한다. 국민조사의 ‘다문화수용성’지표에 높은 점수를 보인 특성들이다(김혜순 2013: 277).

3) 국가별 관심정도와 관심의 편중성

문화다양성과 다문화수용은 글로벌 다양성 및 경쟁력 등을 포함한 국제이해교육, 서구의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과 등치되어왔지만, 대상이 어떤 국가군 또는 문화권인지 구분해야 한다. 세계화나 외국문화에 관심이 많다 해도 일부 문화권에 편중된 관심이라면, 다문화수용

이라 하기 어렵다. 글로벌-경쟁력-영어·중국어·일어 등의 외국어 습득-해외수학경력 등으로 대표되는 세속적이면서 오랜 개발국 지향과, 미개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배려-관용-공유 등 도덕적이고 낮은 가치의 상반되는 지향의 혼재는 국내 이민지형에서 간과할 논제가 아니다.

개발국에 대한 흡수적 수용과 미개발국의 차별적 배제라는 분절현상은 식민지적 특성(예: 조혜정, 1992 등), 문명차별주의(한경구·한건수, 2008), 국가차별주의(김혜순, 2009: 216), 대중적으로는 사대주의 등으로 불려왔다. 한국사회에 엄존하는 현실이지만 한국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미국의 WASP로 대표되는 주류집단과 아시아, 남미, 중동지역출신의 소수 자지위, EU 회원국 출신과 TCNs(third country nationals)의 차별적 이민 수용과 대중의 인종차별이 있다. 영국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백인이면서 문화 동질적이라 간주되는 지역 출신에게 호의적이어서 호주-서유럽-홍콩-동유럽-아프리카-인도-동남아시아 순이었다고 한다(Ford, 2011).

한국사회의 특성은 정치경제적 지배층이 주도해 온 식민과 사대의 역사가 유구하며, 이민 사회에 이제 처음 진입하기 때문에 선진 이민국 보다 차별정서의 외연과 심층성이 더 두드러진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관건은 측정과 지표화 문제다.

국민조사에서 이런 한국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한 “보편성(universality)” 차원(안상수 외, 2012: 36, 55)은 ‘세계시민 행동의지’와 ‘이중적 평가’로 구성된다. 전자는 우주적, 보편적 인류애, 인간존엄성, 세계평화, 관용, 타협 등을 포괄하는 높은 다문화수용과 직결되며 ‘이중적 평가’는 선진국 편향을 측정한다고 했다(윳글, 33-34). 문항작성의 기준 중 하나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반응왜곡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가 명기(윳글, 60쪽)되었지만, 관련 질문은 사회문화자본, 국가주의 회피 등, “사회적 바람직성”(political correctness)이 부과된 내용이라 사회적 과시효과(social desirability effect)에서 자유로운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황정미 외(2007)가 탁월하다. 여러 국가/지역의 다양한 문화측면에 대한 관심을 질문한 후 국가 편중적 관심 측정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과시효과에 따른 왜곡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4개 지역 문화에⁴⁾ 대한 관심도와 미국-동남아 관심의 편중성 각각을 평균기준으로 나누어 응답자를 4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관심이 높으면서 덜 편중된 응답자(D)는 전체의 25.4%, 관심은 높지만 더 편중(B)은 24.4%, 관심이 낮으면서 더 편중(C) 29.8%, 관심이 낮으면서 덜 편중(A)은 19.8%를 차지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는 D 3.67, B 3.54, C 3.31, A 3.29의 순서

4) 지역문화는 음식·요리, 대중문화, 예술분야, 역사와 문화유산, 언어, 자연풍광·관광명소, 사회경제문제의 총 7개 분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4개 척도로 측정했다.

로 나타났는데(윗글, 136-138), 문항구성을⁵⁾ 볼 때 다문화수용정도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수용은 외국문화에 평균보다 높은 관심일 때 관심의 편중여부(3.67, 3.54)에 상관없이 관심이 낮은 경우(3.31, 3.29)보다 높았다. 차이가 두드러지진 않으나 관심과다와 관계없이 편중된 경우 각각(3.29, 3.54)은 편중이 덜 된 경우(3.31, 3.67)보다 다문화수용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할 2009년의 자료는 이들의 측정방식을 반영하여 수집되었다.

4) 지역 관련 논의

박신영 외(2012)에는 국내의 이민관련 연구에 자주 등장하는 ‘인지된 위협’에 지역단위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분석결과가 있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위협인식이 국가재정 부담, 사회문제 야기, 범죄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들의 서울 가리봉동, 대림동 지역주민 대상 인식조사에서 유의한 영역은 환경관리, 경제 활성화, 교육문화고, 범죄/갈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추상적-국가차원과 구체적-지역차원의 인식차이라 하겠다.

다문화수용 관련 연구에서 물리적·행정적 단위나 자료수집 장소로서 지역이 아닌 일상의 삶이 전개되는 생활터전으로서 지역여건에 따른 사회문화적 특성과 현실에 주목한 경우는 많지 않다. 국내 사회과학 전반도 마찬가지여서 지역은 연구가 진행되는 장소(site), 인구, 산업, 교통 지형적 특성 등 물리적·입지적 조건으로 환원된 분석단위, 도시-농촌 같은 지역규모나 행정단위로 존재해왔다. 양애경 외(2007), 오계택 외(2007) 등은 상이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수용성연구를 특정 지역에서 진행한 것이다. 연구진행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 이민자와 지역민의 거주공간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구체화한 국내 연구로는 농촌이 갖는 거리접근성의 한계(양순미 외, 2009)와 더불어 여성의 농업노동 부담(남인숙·안숙희, 2011)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백승대·안태준(2013)은 선행연구들이 지역규모별 비교나 연구진행장소로 지역을 언급한 정도라는 문제의식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지만 지역이 분석되진 않았다. 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언급된 외에는 구성원의 인지와 태도변인의 총합으로 지역특성이 추정되었을 뿐이다.

국민조사에서 지역은 대도시-중소도시-읍면의 <지역규모>와 각 시도의 <권역>별 분류로 분석되었다(안상수 외, 2012: 88-91). ‘다문화수용성’은 <지역규모> 별로 차이는 없었다. 지표의 8개 구성 요소 일부에 유의가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관된 흐름을 추정할 수 없는 결

5)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나라의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 된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는 3개 항목이다(황정미 외, 2007: 138의 주48).

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규모>란 외국인과의 접촉기회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었다. 즉, 대도시는 '거부·회피 정서'가 가장 강했고, 읍면지역과 중소도시의 '문화개방성',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적 행동과 교류의지는 대도시보다 높았다(윳글, 88-90, 136-137).

<권역>별 '다문화수용성'은 충청/강원, 서울/경기, 호남/제주, 영남의 순이었고, 8개의 하위구성 요소별로는 '국민정체성', '거부·회피 정서', '이중적 평가'에서 서울/경기가, 나머지 요소에서는 충청/강원이 가장 높았는데, '상호교류의 의지'에서 서울/경기와 영남이 특히 낮았다고 한다. 이들 결과는 대도시의 개인주의적 경향과 외국인거주 지역의 분리로 설명되었다(윳글, 90-91, 137-141). 대구-부산-울산의 3개 광역시와 경남북 전체를 포괄한 영남권역, 서울-인천과 경기를 포괄한 서울/경기권역이 '대도시'로 특정된 것이다.

즉, 국민조사에서 <지역규모>나 <권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일관된 의미를 찾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체의 설명력이 없거나, 지표의 구인타당도가 낮다하겠다. 이들은 <지역규모>나 <권역>이 외국인과의 접촉가능성도로 구분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권역>별 등록외국인 비율과 다문화수용정도를 비교했는데 정의 관계는 있으나 역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안상수 외, 2012: 90, 136, 140-141).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지역을 독립변수 중 하나로 활용한 김한성·이유신(2013)은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진전을 보인다. 대도시일수록 경제활동 기회와 노동시장 내 합리적 선택 중시가 높고 따라서 소수인종의 차별경험이 적다는 점을 주목했다. 외국인인 다수자에게 위협으로 인식될 때 차별하게 된다는 가시성-차별가설, 반대로, 소수자가 많을수록 소통, 경험, 상호작용의 가능성, 따라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여서 차별적 태도가 감소한다는 접촉가설을 소개했다.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해서 도시화정도는 인구밀도로, 거주 외국인 비율은 다문화가구⁶⁾ 비율로 측정, 분석결과 두 변수 모두 결혼이민자의 높은 차별경험과 관계있다고 한다. 국민조사에서는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지역은 외국인과의 접촉기회가 적어 고정관념과 차별이 높다고 추정했으니, 일면 상반된 연구결과다. 2009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의 신뢰성논란(김석호 외, 2010; 전기택 외, 2013: 6)도 있지만, 이민자가 느끼는 차별경험과 내국인의 다문화수용 관련 답변이라는 차이점, 대도시나 외국인비율이 높은 지역 거주이민자의 차별민감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⁷⁾

6) 다문화가구는 귀화 등 출생이외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임(통계청, 2011)

7)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차별경험을 보고한 영역은 직장/일터가 가장 높고(2.5), 상점/음식점/은행/거리/동네(1.7), 공공기관/학교/보육시설(1.5) 순인데(전기택 외, 2013), 각 상황은 여러 의미로 구분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의 작동정도가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이상의 선행논의에 대한 분석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첫째, 지역의 분석단위다. 지역은 도시화정도와 등록외국인비율로 측정되었지만, 분석단위가 국민조사는 권역, 김한성·이유신(2013)은 시군구였다. 도시화를 경제활동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광역단위가 적절할 것이며, 거주외국인과의 소통과 상호작용, 접촉을 주목하면 시군구보다 낮아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증가와 관계된 접촉가설과 가시성-차별 가설의 공존이다. 백승대·안태준(2013)의 경우, 다문화'사회'에 경북 학생이 더 긍정적인데 반해 외국인에 의해 '인지된 위협'도 경북학생이 더 심각하게 느낀다고 했다. 저자들은 경북에 결혼이민여성, 공단의 외국인 노동자 등이 많아서 외국인과 직접 접촉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만 했고, 상반된 태도는 주목하지 않았다. 국민조사에서도 거주외국인과의 단순접촉 경험은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실질적 교류의 확대는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했다. 또 자주 목격할수록,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이 높지만, '매우 자주 목격', '매우 자주 대화'의 경우도 수용성이 낮다고 한다.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과 계기에 대한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

III. 연구 설계 및 분석틀

1. 주요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2009년에 수집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과 더불어 국내 연구지형을 감안한⁸⁾ 다문화수용정도를 종속변수로 한다. 관련 문항은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공존의 선호도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외국인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정부개입 선호도다.⁹⁾ 앞서 언급했듯이 다문화수용이 학계에 공유된 개념이거나 진단수단이 정해지진 않았다 해도, 다른 목적으로 수집했던 자료를 활용하는 만큼 척도로서 완성도에 한계가 있다 하겠다.

8) 원래 자료에는 이민자를 자산(assets)-부담(burdens)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결혼이민여성-외국인근로자-유학생-다문화가정자녀 등 이민자 집단별로 지역사회에 한정해서 묻는 항목,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척도(Borgadus scale) 관련 질문, 시민권허용 관련 항목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선행연구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9) 실제 질문은, 1)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2)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인종·종교·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 5점 척도로 답하는 것이다.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0.665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0.7보다 조금 낮지만, 일부에서는 0.6 이하의 값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이근희, 2001; Nunally,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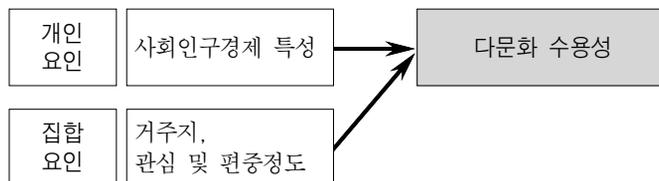
지역은 외국인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의미로 활성화하면서 외국인주민 비율을 분석에 활용했는데, 2012년 국민조사는 권역, 김한성·이유신(2013)은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대중매체나 교통수단에서의 조우, 직장관련 관계 등 접촉유형 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외국인주민, 즉 거주외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접촉이라면 시군구보다 낮은 지역단위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소개하듯이 애초 조사 설계를 동단위의 외국인거주비율을 기준으로 삼았었다.

국내 다문화수용연구에서 국가별 관심과 편중정도 측정의 당위성은 쉽게 성립되어 국민조사에서도 시도되었지만 측정의 적정성은 문제적이었다. 앞서 밝힌 대로 본 연구가 활용할 2009년에 수집한 자료는 황정미 외(2007)의 측정방법을 채택했었다. 설문문항은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문화의 다양한 측면, 즉 음식/요리, 대중문화, 공연전시, 역사/문화, 언어 등 5개 영역별로 관심정도를 1-5점 척도로 질문하는 것이었다. 먼저 이들을 종합한 점수로 관심정도가 높고 낮은 2개 집단으로 나누고,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각의 관심도 차이 또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편중이 크고 작은 2개 집단으로 나누는 다음 이들을 교차시켜 4개 집단을 만들었다.

2. 분석틀

이상의 문헌과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분석틀을 구성했다. 선행의 다문화수용 관련 연구에서 채택해 온 사회인구경제영역의 개인차원 요인에 더하여 집합요인으로 거주지, 외국문화의 관심 및 편중정도로 분류한 집단을 추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틀을 잡았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낮은 학력, 낮은 소득, 낮은 직업지위, 높은 연령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은가 여부다. 둘째,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洞) 거주인 경우 낮은 지역 거주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낮은가의 여부이다. 셋째, 외국문화의 관심 및 편중정도로 분류된 집단 간의 다문화수용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황정미 외

(2007)의 집단 분류와 다문화수용정도의 관계 분석은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 4개 집단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려 한다. 각 집단의 사회인구적 특성과약을 기초로 다문화수용관련 각 집단의 정책적 함의를 찾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3. 자료

1) 자료수집 지역: 대구시 달서구 성서권

달서구는 2013년 현재 인구 62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으로서 대구의 신흥 발전지역이며, 도시계획 체계로도 대구의 3개 부도심 가운데 하나이다. 1988년 월성 개발 이래 상인·대곡·용산·장기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¹⁰⁾ 조성과 함께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밀집 인구가 바탕인 두터운 소비·유통 구조, 동남권 최대 규모의 성서공단의 제조업이다. 1988년 지방공단 지정 이후 2천여 업체가 입주한 성서공단으로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진 반면 환경오염, 교통혼잡, 기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구와 달서구의 커다란 자산인 동시에 경제사회적 부담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전국 단위에서도 눈에 띄는 만큼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다. 성서공단과 아울러 26,0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하는 계명대학교의 메인 캠퍼스가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어우러지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증조사가 이루어진 2008~2009년 달서구의 외국인 주민은 모두 7,046명이었다. 전국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1.8%, 대구시는 0.9%, 달서구 전체는 1.3%인데 비해 성서지역의 1개 동은 5.6%로 안산시 전체의 5.1%를 능가한다(행정안전부, 2008). 아울러 성서공단 지역은 법무부가 파악한 전국 52곳(수도권 25, 지방 27)의 외국인 밀집지역 중 특별 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6곳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¹¹⁾ 성서산업단지의 이른바 '3D 업종'에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인데, 2008년 현재 대구광역시의 등록 외국인 전체의 55% 정도인 7,115명이 달서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달서구에 등록된 외국인노동자는 4,400여명으로 달서구 거주 외국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405명으로 가장 많은 32%이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가 각각 17%, 10%, 4% 등으로 나타난다.

10) 200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행정구역별 주택종류로 정리해서 행정구역별 아파트 거주비율을 계산해보면 2005년 전 국민의 아파트 거주비율은 47.2%, 대구시는 48.2%인데 달서구는 62.7%였다(김혜순·이시철, 2009: 99).

11) 당시 법무부의 특별관리 지역은 서울 구로동, 안산 원곡동, 의정부 성생공단, 청산농장, 일산 가구공단, 대구 성서공단이다(법무부, 2007).

이상, 연구대상인 성서지역은 신흥 부도심으로 대형 아파트단지와 함께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병존하며, 대규모 공단과 종합대학이 공존한다는 타 지역과는 다른 지역특성이 있다. 이런 지역 특성으로 인해 구청 차원의 각종 시책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달서구, 2008a; 달서구, 2008b).¹²⁾

2) 조사개요와 응답자 특성

설문지는 전국 시·도 연구원 및 전국단위 연구원에서 ‘외국인’, ‘다문화’, ‘이주’ ‘외국인 유학생’ 키워드로 검색한 연구보고서와 해외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진이 직접 작성했고, 전문 리서치회사에 의뢰하여 2009. 1. 19-28 기간 수집한 자료 중 일부를 본 분석에 활용한다.

조사 지역은 성서권이면서 거주외국인 비율이 달서구에서 가장 높은 (가)동(5.6%), 주민규모가 타 동 대비 작지만 달서구 평균 비율(1.18%)과 가장 유사한 두 개동(1.54%, 1.79%)을 합친 (나)동, 가장 낮은 (다)동(0.08%)으로 했다. 조사규모는 20세 이상 200명으로 정하고, 통계청의 달서구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가)동 71명, (나)동 76명, (다)동 53명을 할당했으며, 해당지역주민의 성별, 연령대별 분포에 맞는 숫자의 방문면접을 실시했다.

응답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절반을 넘지만 중졸 이하도 11.5%나 되어 성서공단 등의 단순노무인력을 반영한다. 소득은 월200만 원대 이하가 76%인데 대학촌의 특성상 학생이 많은 것과 인근 공단 근무인력 때문일 것이고, 52% 이상이 30대 이하라는 점과도 연결된다. 종교는 무교가 약 절반이며, 불교-개신교-천주교 순의 분포를 보인다.

12) 최근의 사례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다문화 협동조합’까지 설립되었다. 다문화가정끼리 힘을 합쳐 자립을 모색한다는 취지인데, 처음에는 다문화가정의 가장 5명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이 조합은 결혼이민여성 5명에게 이불공장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의 7개 조합과 연계망 구축에 정 등, 역할이 커지고 있다(영남일보 2013. 2. 28).

<표 2> 응답자의 사회인구 특성

		빈도(%)			빈도(%)
학력	대학원 재학 +	5 (2.5)	연령	20대	48(24.0)
	대재/대졸	98(49.0)		30대	57(28.5)
	고중퇴/졸	74(37.0)		40대	57(28.5)
	중중퇴/졸	8 (4.0)		50대	20(10.0)
	초중퇴/졸	15 (7.5)		60세 +	18 (9.0)
소득	500만원	4 (2.0)	종교 (유교 제외)	불교	58(29.0)
	400만원대	15 (7.5)		개신교	33(16.5)
	300만원대	29(14.5)		천주교	11 (5.5)
	200만원대	48(24.0)		없음	97(48.5)
	100만원대	42(21.0)	합 계		200(100.0)
	100만원 -	62(31.0)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외국문화 관심과 편중정도를 중심으로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미국·유럽이 가장 높고(15.68), 일본(17.46), 중국(18.09), 동남아(19.22)의 순서다. 응답자 특성별로 관심 양상을 보면, 우선 연령으로 60대는 관심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반해 50대는 동남아문화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30-40대는 미국·유럽문화에 관심이 특히 높고 동남아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30대의 경우는 일본과 미국·유럽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학원 재학 이상은 관심수준이 가장 높지만 미국·유럽문화에 좀 더 관심이 높으며, 대학 재학/대졸은 미국·유럽에 좀 더 관심 있지만 일본문화에도 관심 있으며, 고졸이하 중학 중퇴이상은 미국·유럽문화에 제일 관심 있으면서 동남아에는 적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모든 지역에 거의 비슷하게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심정도와 편중정도를 교차시켜 나오는 4개 집단, C, D, A, B는(<표3> 참조) 각각 유동적표류형(flexibly drifting), 다문화친화형(multiculture-friendly), 차별잠재형(latent discriminatory), 차별배제형(discriminative)으로 이름 붙이고, 원 자료의 개인을 4개

집단별로 새로 코드한 후 분석하였다. 먼저 C는 외국문화에 관심이 낮으면서 국가별 관심의 편중도가 낮은 경우로 이민자와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향후 입력되는 정보와 경험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보아서 '유동적표류형'이라 했다. D는 외국문화에 관심은 많으면서 국가별 관심의 편중도가 낮은, 즉 가장 개방적인 상태이므로 '다문화친화형'이라 칭했다. A와 B는 국가별 관심의 편중도가 높기 때문에 둘 다 국가 차별적이지만, 전자는 관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차별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차별잠재형', 후자는 차별적 관심이 높은 것이므로 '차별배제형'이라 이름을 붙였다.

〈표 3〉 외국에 대한 관심-관심의 권역별 편중성에 따른 집단 구분

(N = 200)		일반적인 외국문화 관심도	
		관심 낮음 (low interest)	관심 높음 (high interest)
관심의 편중성 (미국-동남아)	낮은 격차 (evenly spread)	유동적표류형 (23.5%): C	다문화친화형 (20%): D
	높은 격차 (highly skewed)	차별잠재형 (21%): A	차별배제형 (35.5%): B

* 셀 안의 알파벳은 황정미 외(2007: 137)와의 비교를 위해 같은 글자를 넣었다. 이들 연구대상의 분포는 위 표의 알파벳순서대로 19.8%, 24.4%, 29.8%, 25.4%였다.

4개 집단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분포를 보인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자는 기혼자 보다 외국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편중성은 다양하여 차별배제형과 다문화 친화형 성원이 많고, 유동적표류형에 더 적게 분포되어 있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은 높으나 관심의 편중성은 무관하여, 차별배제형과 다문화친화형이 많고, 유동적표류형과 차별잠재형에 적게 분포한다.

각 집단의 사회인구 특성으로, 〈다문화친화형〉 응답자는 소득 및 직업상의 특이성은 없는 가운데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으며, 미혼이고 천주교인 경우가 많다. 〈유동적표류형〉 또한 소득과 직업, 성별로 두드러지는 않으며, 40대, 고졸의 학력, 기혼자, 불교인 경우가 많다. 〈차별배제형〉은 성별이 고르되 20대, 대학재학 또는 졸업, 비경제활동, 100만원 미만의 소득, 미혼,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특성을 모두 합쳐 보면 학생일 가능성이 높다. 〈차별잠재형〉은 혼인상태와 종교는 상관없고, 30-40대, 여자, 대학재학 및 졸업, 사무판매서비스직, 300만원대의 소득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앞서 논의대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외국문화 관심도와 그 관심의 편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집단을 유형화 한 후 분산분석(ANOVA)으로 처리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보았는데, 이는 다문화수용정도에 대한 4개 집단간 차이가 각각의

집단 내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의미 있게 큰지를 보는 것이다.¹³⁾ 분석결과 4개 집단 간 다문화수용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statistically significant) 나타났다. 계량 검증을 넘어 실체로도 중요한(substantively significant) 구분인지는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앞서 논의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일반적인 인구통계지표와 함께 4개 집단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간명한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문화관심의 편중정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관심격차” 변수를 새로 만들어 코드화했는데, 평균값은 -3.54였다. 이는 동남아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수에서 미국 문화 관심도 점수를 뺀 것으로 절대 값이 클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이다. 이 변수들을 바탕으로 표본 전체를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며 분산분석을 거쳐 검증한다. 이후 새로 생성된 4개 집단별로 개별 응답자를 배분한 후, 이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회귀분석틀에 산입하였다. 앞서 정리한 유형별 집단은 모두 명목척도로서 카테고리 4개이므로 3개의 더미변수(dummy variables)로 표시할 수 있다. 주요 변수를 합한 회귀모형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여기서 기준집단은 ‘다문화친화형’으로 하고 분석의 중심으로 삼는다. 생성된 3개의 유형 및 회귀분석 모형은 아래 <표 4>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표 4> 집단유형별 더미변수 표시

집단 유형	D ₁	D ₂	D ₃
차별배제형	1	0	0
차별잠재형	0	1	0
유동표류형	0	0	1
다문화친화형(기준집단)	0	0	0

$$y_i = \alpha + \beta_1 D_1 + \beta_2 D_2 + \beta_3 D_3 + \epsilon_i$$

i) 차별배제형에 대한 모형: $y_i = \alpha + \beta_1 + \epsilon_i$

ii) 차별잠재형에 대한 모형: $y_i = \alpha + \beta_2 + \epsilon_i$

13) 4개 집단유형별 일원배치 분산분석에서 ANOVA 가정은 충족되고 있다. 즉 변수 간 독립성이 인정되며, 표본의 수가 충분한 등 정규성 또한 문제없다. 오차항의 분산이 일정하다.

iii) 표류형에 대한 모형: $y_i = a + \beta_3 + \epsilon_i$

iv) 다문화 친화형에 대한 모형: $y_i = a + \epsilon_i$

- β_1 은 차별배제형과 다문화친화형에 대한 평균적인 수용성의 차이,
- β_2 는 차별잠재형과 다문화친화형에 대한 평균적인 수용성의 차이,
- β_3 는 표류형과 다문화친화형에 대한 평균적인 수용성의 차이임.

위 모형에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계량변수인 학력과 소득수준을 포함시키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집합요인으로 현 거주지 변수를 통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5〉).

〈표 5〉 집단별 다문화 수용성 변이 모형: 회귀분석 결과

	β	t	p
α		10.980	.000
D ₁	.050	.551	.583
D₂	-.179	-2.089	.038
D ₃	-.040	-.463	.644
거주지	.224	3.164	.002
소득	-.214	-2.952	.004
학력	.072	.977	.330
R ² = .182		Adjusted R ² = .157	
F = 7.18			

우선 이 모형이 성립에 필요한 주요 가정과 관련한 오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측정오차, 정규성, 등분산성에 문제가 없고, 변수의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측정하는 Durbin-Watson 값 역시 1.93으로 나타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된다. 아울러 공선성 통계량인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2 이하로 표시되면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에서 설명력 약 16% 수준으로 R² 값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일단 D₂ 더미변수 즉 차별잠재형의 경우에 설명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t 값으로 판단컨대 실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귀결정계수의 값이 높지 않은 부분적 이유는, 본 논문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의도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외국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 그리고 권역별로 편중된 관심을 중심으로 마련된 4개 집

단에 대해서만 분석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편중성은, 외국인의 출신국가 뿐 아니라 이민자격 별 차별, 즉 계층에도 작동할 것이다. 이민자, 외국인 또는 다문화수용 관련 질문을 결혼이민자, 노동자, 유학생, 해외투자자 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후자로 갈수록 국가 및 지역경제와 문화에 기여여지가 많다는 답변이 나올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다른 두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큰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점은 차별잠재형 그룹인데, 기준 집단인 다문화친화형에 대비한 차별잠재형의 평균적인 수용성의 차이가 β_2 임을 상기하면 마이너스 t 값인 D_2 로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 질 것이다. 즉 외국에 대한 관심이 낮으면서도 편중도가 심한 집단으로 정의된 차별잠재형이, 그 대척점에 있는 기준집단 즉 외국문화 일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문화권별로 편중도가 낮은 다문화친화형과 비교하여 다문화수용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예상된 결과지만, 경험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D_1 , D_3 더미 변수가 뚜렷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 분석결과는 얼마간 예상되었다. 즉 차별배제형(D_1)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 여차피 어떤 형태의 태도나 수용성이 별로 변이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즉 미국, 유럽 등 개발국 문화에 편중된 관심을 보이는 집단의 경우,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의 주된 초점이라 할 동남아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유동표류형(D_3)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음에서 비롯되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식하거나 더 알아보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역시 수용성의 변이가 관찰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문화수용에 대해, 거주지와 소득변수 각각이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면서 사회과학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 인구통계지표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즉 거주 외국인 비율이 안산시(5.1%) 보다 높은 (가)동의 수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일상에서 자주 눈에 띄는 경우 익숙해지고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소득의 경우 역방향이어서, 고소득자의 수용성이 오히려 낮았는데, 앞서 지역관련 맥락에서 인용했던 연구(박신영 외, 2012)와의 관련을 음미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지역 중 1개 동은 유일하게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나머지 2개 동과 사회경제적으로 확연히 달라서 외국인거주비율이 극히 낮다. 반면, 인근의 대형마트와 교통여건 상 이민자와 거주지역이 분리·절연된 고소득자의 추상적 다문화수용과 달리 이민자의 일상이 직간접으로 목도되는 상황이다. 상기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가리봉동과 대림동 지역의 내국인 대상 조사인데 이민자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 특히 부동산상황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 하겠다. 추상적 수준의 다문화수용과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거주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V. 마무리

이 논문에서는 국제화와 다문화 현상의 개괄적 논의를 기반으로,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차원에 집중하여 특히 외국·외국문화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특정 권역에 대한 편중성이라는 차원을 교차하여 생성된 4개 집단별로 수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요약하면, 4개 유형별로 우선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귀분석에서는 기준인 다문화 친화형에 비하여 차별잠재형에 속한 사람들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가 제일 크다. 차별배제형이나 유동표류형의 경우 일단 본 연구에서는 뚜렷하게 그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마도 차별배제형의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용성 측면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차별잠재형의 경우라면 개발국권 문화에 편중된 관심을 조정 보완하려는 노력이 개인적·사회적 단위로 모아질 경우 의미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표류형 주민들에게는 일단 국제화나 세계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처지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거주 외국인 관련 정책을 마련하거나 시행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기보다는 상이한 집단별로 수용성의 정도를 미리 파악하면서 맥락에 맞도록 함이 중요할 것이다.

지역 요인의 경우, 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수용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는 선행연구에서 일부 입증된 대로 '지나치게' 주변의 외국인이 많거나 접촉이 늘어날 경우 달서구에서도 어떻게 변화될지는 여기서 판단하기가 이르다. 학력의 경우 전혀 통계적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소득은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아울러 다문화수용성 고려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점은 지역 요인이라 하겠다. 폭넓거나 자신과 거리가 상당히 보이는 차원에서 느낄 때와, 직접 영향이 가까이 보일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적인 인지 차원에서는 다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일지라도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관련될 경우에는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예컨대 유학생 등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점에 대하여는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투표권·영주권·노동법상의 권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을 경우에는 유보적으로 변할 것이라 추정함은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직접 응답자 본인의 직장이나 거주지 기타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상의 실증 분석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주민의 샘플링이 완벽하지 못했거나 모형 구성의 타당성이 충분치 못하여 회귀결정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 등은 이 논문의 당연한 한계이다. 활용된 자료가 다른 연구목적으로 2009년 수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오는 한계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이민사회 전개와 정책환경 특성을 감안할

때, 다문화수용 그 자체보다 국가별로 차별화된 관심과 수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가장 큰 기여는 이 점을 공론화하고, 측정과 분석방식을 시도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단일민족·혈통주의 전통에서 가히 유사 이래 처음이자 극히 짧은 시기에 겪는 다문화 경험, 그 가운데는 온정적·시혜적인 '다문화 열기'와 인종차별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과 맞물려 시대적·국가적 과제인 다문화사회통합은 이제 전국적 통일성을 벗어나 지역 밀착적인 관찰과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긴다.

후속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기대될 수 있다. 앞서 열핏 시사한대로 인지적 수용성과 정책 수용성을 구분할 경우는 어떨런지, 예컨대 문화권과 시민권을 비교하는 것은 후속 연구의 영역으로 본다. 시민 자신의 일상생활 또는 경제적 측면과 거리가 먼 음식, 언어, 영화 등 수사적 다문화 논의에는 쉽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경제적 주체로서 "빵과 밥그릇을 나누겠다"고까지 논의가 진전될 경우는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아울러 대구 달서구 외 타 지역, 특히 인구 구성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이 논문에서 일부나마 지역 요인을 관찰한 것이 그 단초일 터이다.

【참고문헌】

- 김석호·이민아·강정환. (201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0년 수시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통계청.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배제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혜순. (2008).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36-71.
- 김혜순. (2009).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모색」. 한국사회학회-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 김혜순. (2013). 이슈와 쟁점: 국가공인 통계인 '다문화수용성조사'의 문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4): 275-278.
-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가족정책, 여성정책, 일자리정책의 위험한 결합. 『한국사회학』, 48(1): 299-344.
- 김혜순·이시철. (2009). 「달서구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기본 구상」. (대구광역시 달서구 연구 보고서)
- 남인숙·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달서구. (2008a). 2008 외국인주민 주요 사업실적.
- 달서구. (2008b). 2009 외국인주민 주요 지원사업 계획.
-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박명선. (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2): 271-303.
- 박신영·김준형·최막중. (2012).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국토계획』, 47(5): 217-230
- 백승대·안태준. (2013). 대구와 경북 지역 청소년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비교 연구 『지역사회연구』, 21(3): 29-51.
- 법무부. (2007). 외국인 밀집지역 관련 대책 보고. 법무부 내부자료.
- 안상수 외. (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2.
- 안전행정부. (2013). 외국인주민현황.
- 양기호. (2006). 지방정부의 외국인 대책과 내향적 국제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2):

- 67-85.
- 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결혼이민여성의 농촌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742.
- 양애경·이선주·최훈석. (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보도자료: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일반인보다 높아
-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윤인진·송영호·김상돈·송주영. (2010).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학술정보, 857-868.
- 윤재선. (1997). 일본의 국제화 대응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대응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12(2): 145-176.
- 원숙연. (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이근희. (2001).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이병량. (2012).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 연구의 경향 분석: 다문화 정책 연구의 지평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한국행정논집』, 33(4): 1243-1262.
- 이시철·김혜순. (2009). 지방 국제화 논의와 다문화 담론: 의제화, 정책, 측정. 『한국행정연구』, 18(2): 109-139.
- 전기택·정해숙·김이선·김영란·주재선·김혜영·손창균·이재분·정기선·황정미·강민정·선보영·최윤정·주유선·박진표·동제연.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12-59.
- 조혜정. (1992).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바로 여기 교실에서』.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통계청. (2011). 보도자료-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가구·주택부문)
- 한경구·한건수. (2007). 한국적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현실: 순혈주의와 문명론적 차별을 넘어서. 김혜순 외.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71-116.
-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Fishman, G. & G. Mesch. (2008). "Research on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of immigrants and societal response: Multi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9(2-3): 83-86.
- Ford, Robert. (2011). "Acceptable and unacceptable immigrants: How opposition to

immigration in Britain is affected by migrants' region of origi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7(7): 1017-1037.

Semyonov, M., R. Raijman, & A. Gorodzeisky. (2008). "Foreigners' impact on European societies: Public views and perceptions in a cross-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9(1): 5-29.

김 혜 순: 1986년부터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University of Hawaii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A Study of Periodic Market in Contemporary Korea, 1985), 연구 분야는 젠더, 지역, 이민다문화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2011),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2014), 정책연구로 「대구광역시 거주 외국인 대상 일자리 제공방안」(2010) 등이 있다. 이민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2011~13) 역임(khs@kmu.ac.kr).

이 시 철: 경북대 행정학부 부교수. The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Measuring acceptance of regulatory growth management policy, 2000), 연구 분야는 도시정책, 국제화, 인력관리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 "지방녹색성장의 비판적 분석"(2013), "도시정책과 토지다이어트의 건강영향"(2012), 역서로 「그린 어바니즘」(2013) 등이 있다. 대전광역시 교통국장, 경북대 행정대학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편집위원장 등 역임(shichul@knu.ac.kr).